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대한민국정부

CONTENTS

PART 1

완전한 경제회복



1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1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2
02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03
03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4
04	수출 6천억불 돌파(+무역규모 사상최대치 달성)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05
05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06
06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07

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01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08
02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09
03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10

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01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11
02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메워 가겠습니다	12
03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공정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13

PART 2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4 새성장동력 확보

01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14
02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5
03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
04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7
05	신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



5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0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
02	기업의 선제적 사업패션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20
03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21
04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22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1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장세 지속, 코로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2차 추경 편성,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편성 적극 독려 *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지원금),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 	
외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회사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現 '21.7.13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21.9월말 기한)는 향후 방역·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착륙 추진 ▶ 필요시 現 1.35조원 수준인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프로그램을 2조원 수준*까지 보강 * 기관별 지원규모(조원) : (산은) 0.3 → 0.5 (기은) 1.0 → 1.2 (신보) 0.05 → 0.3 ▶ 연체채권 발생 등에 대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노력 강화 ▶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연계 지원 	
금융규제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연계하여 연착륙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9월),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12월) 등 	

☑ 차질없는 백신접종으로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추진

- ▶ 금년 1억 9,200만회분 도입,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 → 282개),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 백신접종 진전 등에 따른 경제활동의 점진적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의 도약 및 위기 재발방지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발표	위기재발방지 의료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개발 추진 * 임상시험 비용지원, 백신개발의 원료 전 선구매 추진 ▶ 글로벌 백신개발사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중장기 백신개발·생산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의료원 역량 강화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 17개 시도 및 70개 종진료관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추진 * 중부·호남·경북·경남권 등 4개소 건립 중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2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을 피해 분야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

💡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 + 기존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

'20년 8대 소비쿠폰				'21년 4+4 소비쿠폰·바우처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통합문화	스포츠강좌	농산물	휴가지원
<div> <div></div> 집행완료 <div></div> '21년 이월+집행대기 </div>				<div> <div></div> 집행중 <div></div> 집행대기(오프라인) </div>			

+

6대 소비쿠폰·바우처

□ 기존사업보장

□ 신규

농수산물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 (1차 접종률 50%)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재개 → (70%) 숙박·관광 쿠폰 재개
+프로스포츠관람권 개시 +철도·버스 쿠폰 개시

💡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 ▶ (추진방안)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 10% 캐시백(월단위 환급)
- ▶ (사용대상)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차량구입 등 사용액을 제외
- ▶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 ▶ (기간) 3개월 시행 후 추가연장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대폭 확대

✓ 방역안정과 연계한 소비행사 활성화 등 소비진작 여건 조성

💡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행사로 대대적 활성화

- ▶ 대형업체 + 중소 유통·제조업체 참여지원
- ▶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 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배 수준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배 상향(5 → 10%)



💡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대 소비패키지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

- ①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②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③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방한 관광의 단계적 재개



💡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개발

* 예) 인천공항 출발 → 해외상공 선회비행 → 지역공항 입국(제주, 부산 등) → 지역관광

💡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 운영하고,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 추진

💡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 체결 등 국제관광 부분 재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3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氣를 살리고 투자과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충



세제지원 강화('21.下~'24년)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2조원 +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최대 40~50% 세액공제 ▶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우대금리 최대 1.0%p 제공 ▶ (대출기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 ☑ 신규 프로젝트 수요 발굴, 투자애로 집중 점검·해소 등을 통해
110조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 및 신속 집행 추진

	계	기업		민 자		공 공
		발 굴	착 공	발 굴	집 행	
연간목표	110조원	18조원	10조원	13.8조원	3.5조원	65조원
하반기	58조원	9.2조원	10조원	6.4조원	1.9조원	31조원

-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楚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

- ☑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 강화

대상 확대	세제·임대료 지원	입지 지원
▶ 전략적 국내유치 필요성이 큰 경우 해외 사업장 축소요건(25% 이상) 적용 배제	▶ 법인세 감면 혜택을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2년 이내	▶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 완화

- ☑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ICT	▶ 원격전원관리시스템, GPS 기반 애플미터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모바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산 업	▶ 공유미용실 서비스,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금 융	▶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4 수출 6천억불 돌파(+무역규모 사상최대치 달성)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호조세 지속 지원

수출기업 물류어로 해소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수출금융 124.5조원 공급 등 수출기업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항로 임시선박 추가투입(월 2→4회), 주요 항로별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 우선 배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한도 2배 상향(기업당 1→2천만원),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컨테이너 박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에 컨테이너 박스 신규확보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5조원 집중 지원 * 무보 78.3, 수은 37.4, 신보 7.0, 기보 1.6, 중진공 0.2조원 ▶ 무보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공급프로그램(5종) 운영기한을 3개월 연장('21.6→9월말) ▶ 기업인 격리의무 면제, 백신우선접종 지원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 지속 운영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수주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100개 발굴, '수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 신설 및 하반기 중 500여개 시범 지정 * 글로벌 역량진단·자금지원 우대·해외마케팅 등 연계 지원 ▶ (일반 중소기업) 유망 온라인 수출기업 등 투자유치 IR 개최 지원,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수주 목표 300억불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마련('21.7월) ▶ 인프라 개발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 개편 ▶ 민자사업(PPP)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은 특별계정, 경험증진자금 등 활용도 제고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메가 FTA 등 지역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후속조치 이행 및 CPTPP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FTA 적극 추진 ▶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발효 가속화
양자 경제협력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에 기반하여 백신·공급망 등 핵심분야 중심 협력 강화 ▶ (신북방)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통해 협력성과 가시화 도모 *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회의 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문화콘텐츠·관광분야 협력 강화, 그린뉴딜 분야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신남방) '사람중심'에 초점을 맞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기반한 경제협력 강화 </div> </div>
국제협력 기반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고도화 방안」('21.5월)」 후속조치 이행 ▶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직접 투자하는 개발금융 기반 구축 * 지분투자, 융자, 메자닌, 보증 등을 활용 ▶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확대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5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등 위기지역 회복 지원



- ▶ 경기·고용 회복세가 보다 공고해 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속 운영
- ▶ 조선업 회복의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되도록 숙련인력 복귀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 촉진
*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운영('21. 8월 시범운영 → '22년 본격운영), 채용연계 교육 인원확대(600 → 1,200명), 한시 훈련수당 신설 등
- ▶ 사전예방, 긴급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균형 뉴딜 확산 가속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된 48개 시·도별 주력산업에 금년 중 총 0.3조원 지원 ▶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적용되는 균형발전지표 보완·개선 및 적용대상 사업 추가 발굴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3분기) 및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 배정 ▶ 뉴딜사업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 상향(현행 10%)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가속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既발표 주요대책을 착실히 추진

국가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4개 과제 하반기 추가 착공 등 23개 프로젝트 공정 집중 관리
혁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노력 지속 * (부산)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전남) 에너지벨리 조성 등
도시재생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중 사업지 40여개소 준공 및 생활 SOC 세부사업 300개 이상 추진 ▶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선정

☑ 각종 특구제도를 활용한 지역 혁신공간 창출 지원



- ▶ 연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자유특구 39개 실증사업* 관련 법령정비 및 임시허가전환·특례연장 병행

* (1차: 7개 특구) 24개 사업, '21. 8월 종료 /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21. 12월 종료

더 빠르고 강한 회복

06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년 중 5~6%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 
저소득층 상환부담 완화	▶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 및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기존 보증자리론 대비 금리 △10bp 인하 ▶ 시중은행의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 유도 

☑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 조성

민간 자본 유입 지원	기업 자산매각 지원 강화	리스크 점검체계 선진화
▶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1조원), 루키펀드 도입(1,250억원) 등	▶ 중소·중견기업 보유 업무용 자산의 매입 후 재임대(S&LB) 지원시 자산심사기간 단축	▶ 기업현황 및 금융권 익스포저를 집중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체감 가능한 공급성과 창출을 위해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신속 이행

사전청약 및 사업추진 가속화	단기주택·건설투자 촉진	부동산 투기·부패사슬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청약('22년까지 6.2만호)은 차질없이 실시하고, 하반기중 계획된 3만호 외 2천호 추가 확대 적극 검토('22년 물량 조기 제공) • 2.4대책 6월 입법 토대로 사업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금년 하반기까지 3.8만호, '22년까지 총 8만호 확보 • 서울·수도권에 20~50% 공기 단축 가능한 '모듈러 공법'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 등 차질없이 추진 • '21.11월까지 정비사업 수주비리 관련 '3진 아웃제' 도입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개선)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억원 한도를 2.5억원으로 인상 * 2자녀 이상의 경우 2.6 → 3.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초기 목돈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 초장기모기지(40년)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등

☑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대외신인도 및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주요 현안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평사 연례협의, 외국인 투자자 IR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 「국채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및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IG3·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등 범부처 대응방향 논의 ② 4대 품목별 한미간 부처 협의체 등 운영으로 범부처 대응 점검 ▶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디지털세 관련 OECD·G20 등 국제논의 대응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01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시행

💡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일자리 조기회복	2~3만명	▶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촉진	2~3만명	▶ AI, 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 ▶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	
백신방역 안전대응	6~7만명	▶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 산재 예방 등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보완	3~4만명	▶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 예술인 일자리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180→27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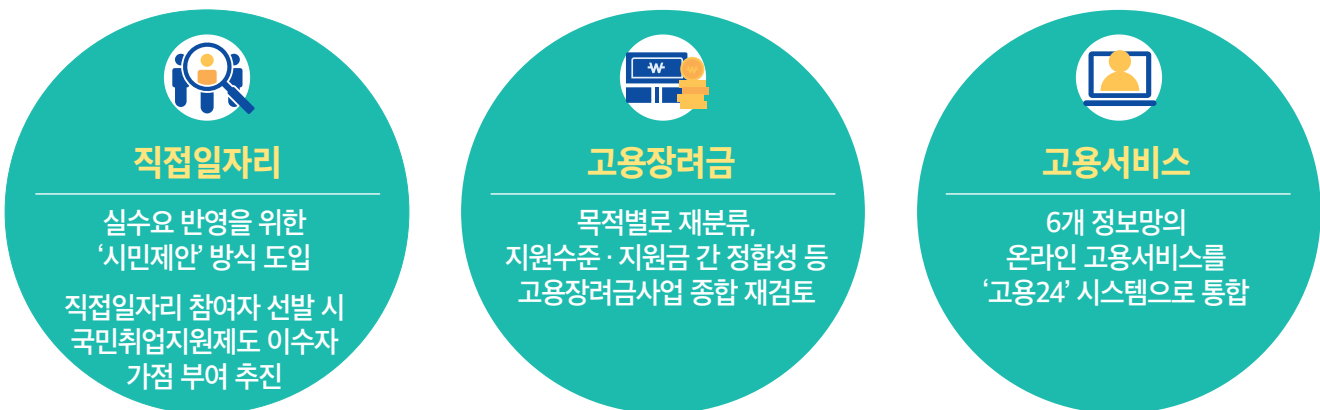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업종

☑ 직접 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버팀목 역할 지속

💡 직접일자리 104.2만개(본예산) 및 1차 추경 일자리 25.5만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하반기 공공기관 1.4만명, 지방공기업 0.2만명 신규채용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지속

☑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노력 지속

💡 「상생형 일자리 관계부처 TF」를 통한 원스톱 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02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극복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대책 추진



☑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 보강

- 💡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 (현행)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 가능
 - * (개선) '21년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19~'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 허용
- 💡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21년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등 피해기업 세제지원 지속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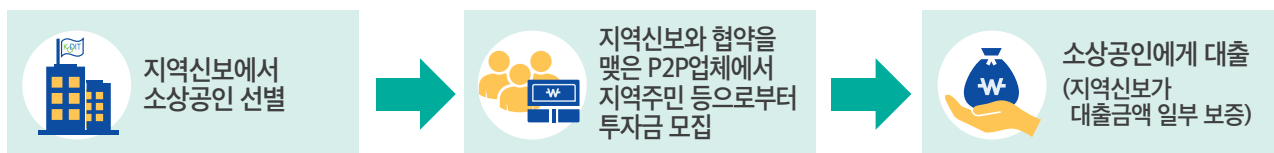
☑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강화

-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 * (현행) 현재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등 필요
 - (개선)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 💡 임대료 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병행
 -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 부여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원 연말까지 지속



☑ 피해기업·업종 경영 안정화 지원 지속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추가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유보 추진
 - * 현재 착륙료(10~20%), 정류료(전액), 계류장사용료(전액) 등 감면 중
- 💡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클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03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안정대책 추진



☑️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주요 물가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예: (3분기)장마·태풍, 가뭄·이상고온, 추석 (4분기)한파, 김장철, 연말요인 등

☑️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절감 노력 강화

식료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규모 확대 및 지급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추석(9월) 및 김장철(11월)은 쿠폰 한도 상향 조정(1→2만원) ② 계란은 쿠폰 적용 품목을 확대(30구→전품목)하되, 할인율은 하향 조정
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eSIM* 도입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M 대신 기기에 내장된 가입정보를 이동사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방식의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료 인하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 시범도입(공급주체, 단지와 무관하게 대기자 통합관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구원 수 증가시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01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 일자리·주거·자산형성·문화생활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일자리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요건 완화
*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요건 완화(3→4억원 이하) 및 취업경험 요건 폐지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시행('21.7월)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월 ~ '21.12월)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월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 ▶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 (도전) 온라인교육·실전검증·사업화지원 결합 '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 신설
 - (성장)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 지원 및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
 - (재도전) 재도전 응원캠프,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채무감면 비율 상향(최대 90→95%)



주거

▶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전세임대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가·역세권 중심 하반기 5천호 추가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 2년 연장('21년말→'23년말) •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000→3,6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 19세를 출생일→출생연도로 조정 * 만19세가 되는 해 1.1일을 맞이한 청년에 대해 지급



자산

▶ 소득수준별 3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소득구간 I	•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지원	
소득구간 II	• 청년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	
소득구간 III	•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도입	

▶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 강화

군 장병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2만명 확대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 강구

※ 7월 중
구체적 방안을 담은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발표 예정

문화·생활

- ▶ 기초·차상위계층 청년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시 100% 발급 지원 추진('22년~)
- ▶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천억원 확대(2,330→3,330억원) 및 '특정용도자금'의 연 대출한도 상향(연간 600→900만원 한도)

☑ 여성·교육·돌봄 등 주요 부문별 격차해소 중점 지원

여성

-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상 경력단절 기간요건 완화(퇴직 후 3년 이상→2년 이상)



문화·예술

- ▶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 확대 및 공연예술제 지원 강화



교육

- ▶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사업 집중 발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활용



돌봄

- ▶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02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메워 가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주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유형 저소득층 소득기준을 중위 50% → 60% 이하로 조기 완화 재산기준은 3억원 → 4억원 이하로 완화('21.10월~) ▶ 상반기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발표('21.12월) →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 방안 검토
전국민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 고용보험('21.7월~) 제도 안착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집중 홍보 시행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월~)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하위법령 개정 등)
한국형 상병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21.3월~)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자격요건, 대상질병, 보장수준 등)

✓ 기존 사회안전망도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피해가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22년~)을 앞당겨 '21.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말 → 9월말)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지급기준 완화 * (현행) 수급권자 결정시 신청가구 외 직계혈족·배우자의 소득 등 고려 (개선) 신청가구 자체만의 소득 등 고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적의료비 지원 수준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현행)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일률 지원 (개선) 지원비율 50%를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공급 축소 우려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햇살론(2.4 → 2.7조원)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할 경우 대출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 지원 	
--	---

✓ 교통약자·한부모가정·보호종료 아동 등 주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콜택시 등록시스템 전국 단위로 통합, 휠체어 사용자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차 등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03 경제·사회 전반에 상생·공정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 추진

개인·단체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기부자 및 우수 기부금 단체 포상 실시 * 착한 기부자에게는 공항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 혜택 부여 검토 ▶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편의 제고 * (기부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반영, 실시간 조회 (기부단체) 관리비용 감축, 법정서식 제출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문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21.7월) ▶ 공익법인 회계감사 결과 감사인·감사의견 등 핵심사항을 연도별로 게시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유형별·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다양화,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박람회'('21.7월) 개최 ▶ 컨설팅·R&D·금융지원간 연계 및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판별기준 개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사업 연계 등 추진

✓ 공정·상생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	
▶ 플랫폼기업-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소비자 피해예방·구제 및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중소 기술탈취 피해 최소화	공정 거래관행 착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온라인 피해신고 및 행정조사 활성화('21.9월) ▶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검토('21.下) *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금대금 직접 지급 합의시 대금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 의무화('21.下 시행령 개정) 
대기업집단 등 규율의 합리성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계열사 및 공익법인 관련 공시 기준 구체화 * 대기업집단 동일인에게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등 ▶ 감사환경의 변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새로운 표준 감사시간 마련('2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속히 제정 ▶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 본사 감독·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새성장동력 확보

01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하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해 분야별 중점과제 집중

디지털	<p>▶ DNA·비대면 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p> <p>* 격오지 군병원 등(36개소)에 AI 개발 솔루션 현장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초·중등 38만(누적) 교실 고성능 WiFi 구축, 주요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등</p>	
그린	<p>▶ 그린 리모델링 민간 확산, 신재생에너지·친환경모빌리티 보급 가속화</p> <p>*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p>	
안전망	<p>▶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p> <p>*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마련, AI혁신허브신설 등</p>	

☑ 재정투자, 법·제도개선 등으로 한국판 뉴딜 확산 뒷받침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		
	10대 입법과제	15대 제도개선	현장 규제개혁
 <p>▶ '21년 예산 22.5조원 차질 없이 집행</p> <p>▶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22년 투자계획 마련</p>	 <p>▶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p> <p>* 환경영향 평가법, 데이터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하반기 내 입법 추진</p>	 <p>▶ 입법과제 후속조치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 14개 선정 집중추진</p> <p>* 자율차 규제혁신,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 등</p>	 <p>▶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개선(現 191개)</p> <p>*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한 투자애로 발굴·해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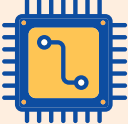

☑ 뉴딜펀드·정책금융 등을 통한 민간자금 유인 촉진

펀드추가 조성	<p>▶ (정책형 뉴딜펀드) '22년 중 추가 4조원 조성 목표, 국민참여 뉴딜펀드 하반기 추가 조성 검토</p> <p>▶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대상인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p> <p>* (현행)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 → (개선)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 추진 검토</p>	
뉴딜정책금융 17.5조원 + α	<p>▶ '21년 공급계획인 「17.5조원+α」(5년간 100조원) 초과달성</p> <p>▶ 정책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뉴딜 관련 펀드 조성·출자</p>	
민간투자·혁신조달의 뉴딜연계	<p>▶ 디지털·에너지·환경·안전 분야 등에 포괄주의 활용하여 신유형 대상사업 발굴 확대</p> <p>▶ K-뉴딜 관련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구매 촉진</p>	


새성장동력 확보

02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

미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검토 및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 개시 및 법적근거 마련 *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예:10%) 부여 	
시스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최대 40~50% 세액공제,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전력 인프라 구축비 최대 50% 지원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집중 지원 ▶ 미래차·반도체기업·IoT기업 간 협력모델 기반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지원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R&D 지속 지원 및 백신 원부자재 등으로 지원분야 확대 ▶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 본격 시행 * 국가신약개발사업(2.2조원),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6천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1.2조원) 등 	

☑ D.N.A. 생태계 기반으로 新산업 발굴 및 혁신서비스 제공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 ▶ 법원 온라인 판결문 공개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모색 ▶ 개인 주도 데이터 전송권의 법적기반 마련 및 마이데이터 산업 전분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콘텐츠 등 5G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 ▶ 6G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반도체산업 활성화 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반의 AI 집적단지 착공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AI 검색서비스 제공
		

☑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문제해결형 대책 순차 발표

클라우드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5개 분야(금융·제조·물류·에너지·교육) 인프라·서비스 고도화
블록체인	▶ 블록체인 성공사례 확산방안 및 사업 대형화 추진방안 마련, AI·IoT 등 융합기술 개발 지원
지능형로봇	▶ 쇼핑몰 등에 5G·AI기반 다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서빙·조리·교육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국민 건강정보 통합),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메타버스	▶ 주요명소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가상·현실세계 연결하는 양방향 XR 서비스 제공

☑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 뒷받침을 위해 '21년 57.3조원(하반기 25.3조원) 정책금융 지원

새성장동력 확보

03 주력 제조업·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친환경·스마트화 중심 제조업 전반 혁신 강화 및 주력산업으로 혁신 확산

친환경·저탄소 대응

-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마련('21.12월)
- ▶ 「2050 탄소중립 산업 R&D 전략」 수립('21.9월)으로 민간 주도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본격 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AI·데이터 기반의 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1.12월)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21.7월),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 지원



주력산업 혁신

조선업 세계 1위 수성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 ▶ 스마트야드, 無탄소 선박 기술개발 지원

- ▶ 고효율·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추진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 지원 확대로 소부장 2.0 성과 가시화

- ▶ (소부장 핵심품목 338개 + α) 공급 안정화 지속 추진
- ▶ (미래선도품목 65개) 공급 창출을 위한 R&D 중점 추진

- “소부장 으뜸기업” 20여개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 투자지구에 대한 인센티브(토지이용특례, 임대료 감면 등) 강화



☑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 ▶ 「新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21.11월)



한걸음 모델 적용

- ▶ 한걸음 모델 '21년 상반기 과제 2개의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

*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2개 과제



新서비스 혁신성과 창출

- ▶ 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령 개정

- 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21.10월)
- ②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계획('21.12월)
- ③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21.12월)
- ④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추진('21.12월)

☑ 문화강국 도약 기반 구축

K-문화산업 육성



- ▶ AI, 5G 등 新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제작과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

한류 확산



- ▶ 재외 문화원 소재지 중심 비대면·온라인 문화축제 개최('21.10월)

문화향유권 증진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원 확대
- ▶ 장애인예술 지원계획 수립

새성장동력 확보

04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적 기반 확충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 설립을 허용하되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부작용 최소화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에 다수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예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대상 범위 확대, 행사요건 합리화, 세제지원 확대 등 ▶ 벤처기업법 일몰기한 폐지 및 지원제도 전면 재정비

✓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 확충

자금공급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유망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기업 상장프로세스 전면 개편('21.5월~)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기업 심사시 성장잠재력 반영, 유니콘기업에 대한 Fast-track, 심사 실시 ▶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장기투자 확정시 공모주식 일부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 밸리식 투자조건부 용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상환조건으로 저리대출 ▶ 혁신기업 벤처대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대출을 증권사 경영업무에 추가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 육성 ▶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목적에서 투자자기준으로 재편,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스타트업 1000 지원규모 확대(200→400개사)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자 본격화(1조원) ▶ K-유니콘프로젝트 지원,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유니콘(~1천억원) → 예비유니콘(1천억원~1조원) → 유니콘(1조원~)

✓ 新산업 등 혁신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 확대

新산업 창업	핀테크 창업	콘텐츠 창업	제조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커 공간을 전문·특화 랩 중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랩 12→30개, 특화 랩 9→39개

✓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아이디어 실증지원 플랫폼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 구축 ▶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기술·아이디어사업성,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D-테스트베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펀드 조성 ▶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


새성장동력 확보

05

新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AI·미래차 등 新기술 분야의 인력 집중 육성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 지원 범위 확대 및 협업예산을 통해 '22년 예산에 반영
* ('21년)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 ('22년) 미래차·시스템반도체·그린뉴딜 등 22개 신기술 분야
- ▶ 소프트웨어, 반도체, 의과학자 등 특화인력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	반도체	의과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21~'25년간) 총 41.3만명 + α 양성 (기존 32.4만명, 추가 8.9만명) * (단 기)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단녀 등 SW전문교육 * (중장기) 기업·대학협력형 고급인재양성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총 3.6만명 양성 * 「K-반도체 전략」에 따른 학사·전문·실무인력 등 분야별 반도체 인력 양성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경쟁력 및 고령사회 대비, 별도 Track으로 양성 ('21. 下 방안 마련, '22. 上 시행) * 학위·임상수련·전문인 등 과정보다 연구활동 지원, 임상-연구간 양립환경조성 등

☑ 혁신적인 디지털 인재양성 시스템 도입

K-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	기업 주도형 디지털 인력양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수요자 친화형 포털 「K-digital Academy(가칭)」 구축 ▶ 빠른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비하여 훈련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K-digital 경력개발로드맵(가칭)」 설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新산업 분야 우수 훈련모델」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 * 대한상의 등이 사업운영, 기업은 교육과정을 설계·개발 및 교육훈련 제공 * 훈련 수료생에게 기존 기업 자체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 부여 ▶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디지털 인재양성체계 확산 지원

☑ 성과 중심으로의 직업훈련체계 개편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학연 협력체계	新기술 연구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D-net 강의 확충, 훈련기관 3단계 구분 및 차등 지원 ▶ 성과기반 훈련비 지원체계 도입 ▶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을 위한 '최소훈련시간' 단축('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선도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강화 및 '허브대학' 지정 검토 ▶ 평가지표 개선 및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제도개선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유휴 R&D 장비의 대학·중소기업 연구시설 이전 지원 확대 * 점검·이전·수리비 지원, 수요기관 매칭을 위한 종합포털 운영 ▶ 신기술 연구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구축 적극 지원 * 국립대학 전력공급 실태조사, 최적 연구시설 입지 선택 지원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0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탄소중립
시나리오
·
세부 추진과제

기후대응기금
신설
·
4대 핵심분야
지원

- ▶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6월)
- ▶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발표('21.11월)
- ▶ 「탄소중립 3+1전략」의 주요 정책 순차 발표(~'21.12월)

* 「탄소중립 학교환경 구성 및 지원방안(4분기)」 등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제도·기반구축 지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중립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기반 구축, 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 개발

☑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하여 국내 ESG 인프라 고도화

기업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12월)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K-녹색분류체계(Taxonomy) 마련 	
공공부문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21.12월) ▶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교육 강화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21.12월)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저탄소화 지원

수소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시범도시(3개) 착공('21.7월)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지자체 인허가의제 제도 시행('21.7월) ▶ '청정 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인허가 제도개선 ▶ 풍력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규정 마련 추진('21.12월)
친환경에너지 사용 유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K-RE100, K-EV100 이행 지원 ▶ 205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부표 보증금제 도입, 수거 강화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이익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자·양자 협의 적극 대응 ▶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02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관련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전략적 수요 발굴·맞춤형 지원	기존 제도 활용도 제고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간 칸막이 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구조 개편 수요 발굴·선별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파트너십」 구축('21.12월) ▶ 기업별 특성·수요에 따라 사업재편·전환제도 또는 재정·금융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등록면허세 감면적용 사업재편 범위를 신사업 진출 기업 등까지 확대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21.8월) ▶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승인 요건을 신사업 진출, 생산·경영혁신 등까지 확대 * 「사업전환법」 개정안 발의 추진('21.12월) ▶ (제도간 연계) 사업재편 추진 기업과 하청·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




✓ 자발적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산업혁신·재건 금융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 패키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산업)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투자·보증·자산매입 등 다양한 지원 위한 기존제도 체계화 ▶ (신산업) 미래 전략분야의 정부 R&D 과제 성공 기업에 금리우대 대출, 연계 투자를 통한 성공사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수준 확대(0.1→0.2조원 수준) ▶ 중소·벤처기업 M&A 대상 세제 인센티브 확대 * 공동 사업재편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 * 기술혁신 M&A 법인세 감면 등 일몰예정인 세제혜택 연장 검토 

✓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원활한 인력전환 지원

구조적 지원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지역 뉴딜 연계로 신산업으로의 인력 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시 근로자 역량강화 및 직무전환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 사업재편 승인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신산업 분야 직무 전환 지원 검토 



✓ 사업재편 컨트롤 타워 신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컨트롤 타워 정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금융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재무·운영 상황, 개편 의지 등을 포괄하는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정책금융센터에서 산업혁신·재건프로그램 내 중복 지원 등 점검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03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 3대 인구리스크에 대비하여 「4 + α」 전략으로 중점 대응

3대 인구리스크		4 + α 대응전략	
인구 감소	인구절벽 충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소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축소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경쟁력 강화 ▶ 산업현장 숙련인력 양성 	
지역 소멸	지역소멸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초고령 사회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 α →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인구통계 관리·분석, 연구기능 강화			

☑ 인구 TF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구체화

인구 TF	저출산 극복 5대 지원 패키지 보강	고령사회 적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인구 TF(’21.2월~)」를 통해 4 + α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별 대책 순차 발표 ▶ 제1기 및 제2기 TF 과제 이행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계획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 ’22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마련 ▶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우수제품 우선구매 지원



☑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 방안 등 마련

어 촌	농 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일자리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 ▶ 어촌뉴딜 신규 50개소 선정으로 낙후된 생활 SOC 개선 지원 ▶ 지역소멸대응형 시범사업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내·외국인 파견근로자 활용 시범사업 추진 ▶ 노후주택·빈집 정비, 축사·공장 난립 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04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시장 혁신 지원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채용·임금 등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 및 정부지원 사업 우대 지속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 연구개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등 보완제도 확산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등 공정채용 지원 지속 ▶ 통일된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혁신 노력 강화

재정총량관리 및 지출 효율화	국민참여 기반 재정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21~'25년) 중 총지출 증가율 단계적으로 안정화 및 '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 ▶ 위기시 한시적 증가사업의 질서있는 정비와 다부처 공동 협업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예산 사업 발굴 활성화 ▶ 재정운영 전 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공공조달 체계의 전략적 운용 및 국유재산·국가채권 관리

공공조달체계 전략적 운용	국유재산 효용극대화	국가채권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혁신구매 목표*상향 조정 및 혁신제품 수** 지속 확대 <p>* 물품구매액의 1%→1.2% ** '20년 345개→'21년 900개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특례 사전심의, 특례 사후 존치평가 등 특례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관리 사각지대 해소, 채무자 재산자료 요청근거 마련, 회수위탁 실효성 제고 등 「국가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

☑ 공공기관 윤리경영, 재무관리 강화 등 경영혁신 노력 지속

윤리경영	재무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지표 중 윤리경영 비중 확대 및 평가내용·기준을 강화 ▶ '표준 윤리경영 진단모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 재무상황에 따른 차별적 관리체계 도입 <p>*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 증원·출연 제한 재무건전성 엄격관리를 위한 경영평가기준 강화</p>
보수체계	안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중심 보수체계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추진 및 사회적 대화 지속 ▶ 기관별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점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기관 개선계획 수립, 안전컨설팅 등 후속조치 시행